

투데이 칼럼

‘교실 5명 중 1명’ 다문화의 시각변동, ‘학력꼴찌’와 ‘학폭오명’ 대책 필요

전북의 교실은 공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질적 파산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선거관의 눈먼 고발전과 세 대결 속에서 철저히 지워졌지만, 교육 당국이 내놓은 정량적 데이터들은 전북 교육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입계점에 도달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가장 참담한 지표는 학교폭력과 학력의 빈비례 수치다. 교육부의 최신 실태조사에서 전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4%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1~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통계에서 전북의 수능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위(꼴찌), 국어는 16위로 바닥을 기고 있다. 수능 상위권의 척도인 1·2등급 합산 비율 또한 4%대에 그쳐 수도권 반토막 수준이다. 교실 안에서는 언어폭력(37.1%)과 사이버 따돌림으로 아이들 상처받고, 학업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고착화된 이것이 바로 전북 교육의 민낯이다.

이 ‘질적 붕괴’의 한복판에 지역 교실들을 강타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도 맞물려 있다. 전북 전체 평균 다문화 비율은 5%대이지만, 일부 시·군 지역은 무려 18.2%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당수 군 지역 역시 교실 안 아이들 5~6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채워지는 거대한 시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전주(2.7%) 같은 도심 지역도 이 흐름의 사정권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이창호 전 국립군사대학교 총장

가장 치명적인 난제는 한국어를 거의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의 급증이다.

전북 특유의 수능 표준점수 꼴찌라는 학력 파산과 전국 최상위권의 학폭 오명은 결코 학생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주범은 교실 환경이 이토록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음에도, 과거의 낡은 학정(學政)에 갇혀 학교 현장을 방치한 교육 당국의 ‘시스템적 실패’에 있다. 정량적 학력 진단 시스템을 무력화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실을 키웠고, 언어 장벽과 소통 부재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초기 갈등 중재와 행정 서류 독박을 오롯이 평가 교사 한 명의 어깨에 다 떠넘겼다.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와 학습 지도에 쏟아야 할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가 행정이 완전히 빼앗아 가 버린 구조, 바로 이 교육 행정의 무능과 방치가 일반 학생들을 포함한 전북 전체 아이들의 학력 동반 추락과 교실 마비를 야기한 진짜 톱동이다.

이 구조적 모순을 끊어내고 교실

을 구하기 위해 교육청은 즉시 실행 가능한 사중 처방전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북특별법 특례를 발동해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일반 교실 진입 전 언어를 집중 이수하는 ‘거점형 한국어 몰입 학교’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교실의 수업권 침해와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도화선 자체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교육청 인프라와 결합하는 ‘지방소멸 대응 교육협력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우수 강사를 직접 고용해 과격적인 출강 수당을 주는 ‘교육청 전국 최고와 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거점형 방과 후 스텝 서비스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시행 중인 중도입국 학생 대상 임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기존의 분절된 지원

을 공교육의 정식 커리큘럼으로 승

을 구하기 위해 교육청은 즉시 실행 가능한 사중 처방전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북특별법 특례를 발동해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일반 교실 진입 전 언어를 집중 이수하는 ‘거점형 한국어 몰입 학교’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교실의 수업권 침해와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도화선 자체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교육청 인프라와 결합하는 ‘지방소멸 대응 교육협력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우수 강사를 직접 고용해 과격적인 출강 수당을 주는 ‘교육청 전국 최고와 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거점형 방과 후 스텝 서비스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시행 중인 중도입국 학생 대상 임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기존의 분절된 지원

사설 이세종 열사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40분께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옆 콘크리트 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깨져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였다. 당시 학생회관 당직이었던 직원 임모 씨는 훗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조금 전까지 학생회관 안에서 활약 농성을 하던 전북대 농학과 2학년 이세종(당시 20세)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피격 이후 대학가는 이른바 ‘서울의 봄’ 분위기로 들끓었다. 전북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유신 체제를 폐지하고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고, 학생회관에는 철야농성이 이어졌다. 1980년 5월 초에는 수천 명이 전주 시내로 진출해 시위를 벌였다. 그러던 5월 17일 밤, 권두환 신군

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전국 대학가에 계엄군 투입이 시작됐다. 5월 18일 0시, 전북 익산 금마에 주둔하던 7공수여단 31대대 병력 수십 명이 군용 트럭을 타고 전북대에 진입했다. 학생회관은 순식간에 포위됐다. 군인들이 육설과 함께 들어닥쳤다. 학생들은 총 개머리관과 곤봉, 군화발에 무차별 폭행당했다. 혼란 속에서 학생들은 옥상 방향으로 도망쳤다. 이세종 역시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1985년 전북대 학생들은 교내에 추모비를 세웠지만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 이후 다시 세워졌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1998년, 사망 18년 만에 이세종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됐고, 이듬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올해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7명 확정

올해 전주시민대상을 받게 될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주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7명을 확정했다. 문정애 씨는 103세의 노모를 정성껏 돌보는 외중에도 아파트 공동체 및 경로당 등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는 등 모범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효행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학술대상 신희균 씨(전북도 민일보 사장)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창설 및 운영을 주도하고 풍납학사 건립에 앞장섰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문화예술대상 양기석 씨는 40여 년 간 200여 편의 공연을 펼치는 등 관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으며, 전주마당창극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 정인준 (주)고원공간정보 대표이사는 전북 지역 공간정보 산업 발

전에 기여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재 양성에 앞장선 은 점이 인정돼 산업·기술대상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회봉사 대상은 전주시세마을 회장을 역임하며 ‘좋은 이웃 만들기 운동’ 및 ‘지구촌 살리기 환경운동’ 등을 전개하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온 송병용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최형원 씨는 전주시체육회 설립에 기여하고, 대규모 체육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체육대상을 받게 됐다. 복지대상 서양열 씨는 전주시 복지현장에서의 장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시 복지정책 발전에 앞장서 왔다. 시상식은 6월 19일로 ‘전주시민의 날’에 있다.

이번주 금요일은 쉽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우리 아이들의 안전,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페달을 밟지 못하면 미끄러뜨리는 ‘스키딩’이나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스탠딩’ 같은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는 고정 기

어(Fixed Gear) 자전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트랙 경기용으로 개발되어 주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특성상 출발상황에 자전거를 멈추기 어려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픽시 자전거는 최고속도가 50~60km에 달한다. 또한 일반 자전거는 손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해 멈추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면 속도가 줄면서 미끄러지듯 멈추는 만큼 일반 자

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2배나 길어 출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중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18세 미만 청

소년이 단속될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장비일 뿐, 도로 위에서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성원 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